

종합·해설

총리 후보군 윤곽... 장·단점 비교

‘실무·행정형’ 인선... 국회인준 변수

한명숙 총리의 퇴진 예정일(7일)이 다가오면서 새 총리 후보군의 면면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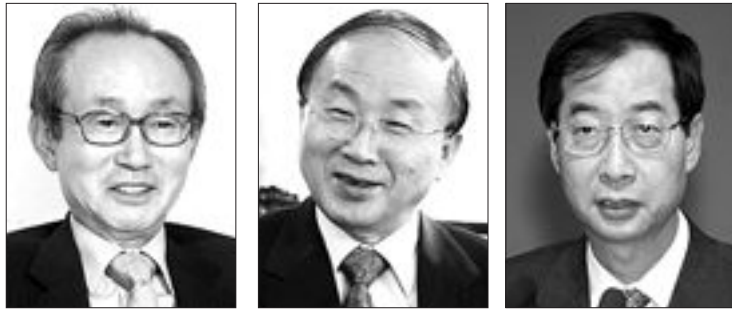
청와대는 전윤철 감사원장과 김우식 과기부총리,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총리 후보군에 올려놓고 관련 자료 검토와 의견 수렴 등 막대한 인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후보군이 이렇게 압축된 것은 새 총리를 ‘정치형’, ‘코드형’ 총리가 아니라 ‘실무·행정형’ 총리로 인선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인선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정치색이 없고 행정, 관리경험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철학’에 정통한 인사를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세워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노 대통령의 인기 말 국정운영에 적임이란 평가가 따른다.

새 사람 모두 이른바 정치적 컬러가 뚜렷한 ‘코드인사’와 거리가 있는 데다 중량감 있는 ‘비(非)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이 총리 후보로 부상한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후보군 내에서도 각기 장·단점이 있고, 이런 차이가 노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선의 희비를 가를 것이라 기대



〈전윤철 감사원장〉 〈김우식 부총리〉 〈한덕수 전 부총리〉

전 장악력 높지만 ‘핏대’ 문제 김 대통령 이심전심, 실무 약해한 민생 정통... 성격 너무 온유

■ 새총리 후보군 비교

Table comparing candidates: Jeon Yun-cheol, Kim Woo-sik, Han Deok-su. Columns include position, birth date, education, and political party.

적인 관측이다.

먼저 전윤철 원장은 66년 행사에 합격한 뒤 40년간 공직생활을 해 공무원 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높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참여정부 들어 감사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 정부 내 대표적 개혁분자로서의 이미지를 쌓은 것도 인기 끌까저 국정 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일맥상통

하는 면이 있다. 단점은 ‘핏대’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인식돼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정통 경제관료로서 전 원장 못지 않은 행정경험에 합리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전 부총리를 주목하는 시각이 나온다.

한 전 부총리는 참여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 직무대행을 거쳐 국정자문과와 민생 문제에 밝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 전 부총리의 온유한 이미지로 인해 공직사회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엄존한다. 그가 전 원장과 함께 호남 출신이란 점도 인사권자인 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리 유력후보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김우식 카드’다. 김 부총리는 우선 충청 출신이어서 지역 문제를 피해갈 수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1년 6개월간 지내 노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정책방향을 꿰뚫고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학자 출신으로 실무·행정형 총리 콘셉트와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평가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운찬 대선행보 나서나

대통령 발언·대운하 등 각종 현안 비판 목소리

‘4·25 재보선 역할론’ 주목

범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대선행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 전 총장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대선출마와 연계될 수 있는 민감한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과감하게 드러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전 총장은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대해 “포괄적 의미의 정치라면 잘 모르겠는데 정치와 경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면 그대로 경제보다

정치가 중요하다 의미라면, IMF 경제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고충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비(非) 정치인 출신인 정 전 총장을 겨냥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는 만큼 정 전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반박의 성격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정 전 총장은 또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과 관련, “어떤 (경제적) 프로젝트든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적 평가는 없었지만, 특기에 따르는 비판적 뉘앙스를 풍기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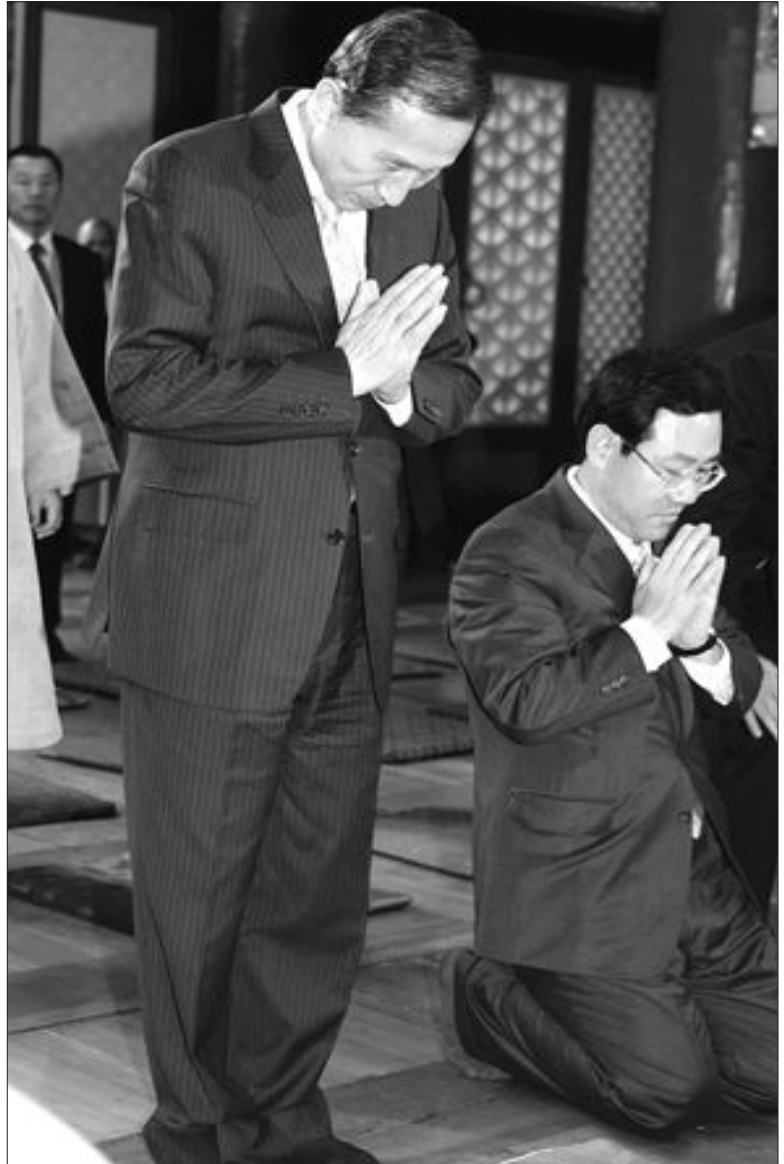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대선입장표명을 통해 대선출

마를 위한 명분을 하나씩 쌓아가는 전략적 행보를 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전 총장이 대선출마 쪽에 무게 중심을 둔 채 ‘타이밍’ 포착을 위해 정치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가 대선출마를 결정할 경우 그 시점은 대선일정 등을 감안할 때 6~7월 이전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하지만, 변수는 4·25 재보선이다. 특히 범여권 일각에서는 정 전 총장이 대선 출마에 직접 출마하거나 선거에 출마를 꺼스러할 경우, 당장 대선주자 ‘빅 3’ 대열로 수직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재보선 출마 의사가 없다”는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재보선 역할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합장하는 이명박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4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천태동 구인사 대웅전을 방문, 수행원들이 예불을 하는 동안 합장으로 대신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권노갑·박지원에 ‘윙크’

‘동고동 정계개편 역할론’ 눈길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이 3일 최근 사면·복권된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을 만나 거듭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전 의장은 권 전 고문의 도움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나 민주당 시절인 2000년 12월 ‘권력의 2인자’였던 권 전 고문에게 ‘2선 후퇴’를 요구, 결국 최고위원직 사퇴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하순 시내 모처에서 권 전 고문을 만나 사면·복권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장은 또 권 전 고문과 함께 사면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도 전화로 걸어 위로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장이 이처럼 동고동계의 핵심인 두 사람을 잇달아 접촉한 데 대해 최근 동고동계의 정계개편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끌어들이므로써 정계개편 국면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호남인심까지 얻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지영기자 jpkpark@kwangju.co.kr

쏠대 앞둔 민주당 ‘유령당원’ 파문

1,725명 입당원서 등 근거 서류없이 조사 착수... 지도부 책임론 부상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 ‘유령당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당내 일각의 문제 제기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당원명부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입당원서 등 근거 서류가 전혀 없는 ‘유령당원’이 현재까지 1천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령당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대환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령당원 규모=민주당은 지금까지 자체 조사결과 총 1천725명의 유령당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시당 434명, 경기도당 450명, 전남도당 400여명 등이다. 타 시·도당에는 집계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원명부와 입당원서를 일일이 대조한다면 유령당원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등록 배후=당원 등록은 민주당 조직부 담당 인사가 관리한다는 점에서 유령당원 등록은 조직부 소속 당직자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문제는 유령당원이 전국에 분포한

다는 점이다. 조직적으로 전국에서 유령당원을 모집한 것이다. 이는 유령당원을 등록한 사람은 일반 당직자 일지라도 배후는 상당한 거물급이지 않느냐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한편, 정당법상 정당은 각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관리하게 하고 당원명부도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통합관리하고 시·도당에는 당원 명부를 배포하지 않아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등록 시점과 배경=이번 유령당원 등록은 지난해 10월30일이라는 특정 시점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유령당원 등록은 전당대회를 노리고 이뤄졌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제·보궐 선거 일정이 없었던 데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만이 2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배기운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유령당원 가운데 후원당원 숫자는 10%대로 미미하다”며 “또한, 유령당원이 전당대회 대의원으로 뽑힐 가능성도 낮다”고 전당대회를 노린 유령당원 등록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파문 확산 예고=우선 지도부 책임론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전당대회하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유령당원 파문에 일어난 만큼 장상 대표는 물론 사무총장 등 고위당직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입당원서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당원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당원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당 차원에서 당원 명부 및 입당원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유령당원을 대의원 선정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07년(上) 제17기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모집. 모집요강, 접수처, 시행 및 주관: 한자한문 지도사 자격인준회.

국비훈련생 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교육과정, 교육내용, 기타사항.

국가직/지방직 시험대비 9급공무원. 김중규 행정학 문제풀이 특강. 무등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3월2일 첫진도 개강. 주택관리사.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232-1088. 취업률 100% ~ 80%.

2008년 현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3월5일(월). 김영대학면입학원.